

# 수자원공, 4대강 기록물 등 무단파기

### 국무회의 보고후 5차례 걸쳐 진행...16톤 물량 절차 없이 폐기 공사, 절차상 문제점 인정...“보존가치 낮아 일반자료로 관리”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 사업 등 일부 원본기록물을 법적 절차 없이 폐기하려다 적발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기록원의 발표에 대해 “검히히 수용한다”고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 수공의 기록물 파기와 관련해 현장 점검 결과 일부 원본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하려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수공은 주요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 보고됐지만 1월9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록물 반출 및 파기를 반복했고 특히 1~4차에 걸쳐 16톤 분량의 기록물 등이 폐기목록이나 심의절차 없이 파기했다.

수공의 무단파기 사실은 지난달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이 언론 등에 알람으로써 드러났다.

국가기록원은 현장조사에서 사무실에 쌓여 있던 자료(수공은 조직개편 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자료라고 주장)를 즉시 폐기금지 및 봉인하고 원본으로 추정되는 407건의 기록물은 선별해 원본 여부와 폐기 절차 등을 점검했다.

국가기록원은 점검결과 확인대상 기록물중 302건은 원본으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를 해야 하지만 보관하는 등 등록하지 않았고 평가심의 절차없이 파기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출하다 회수된 원본기록물에는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메모 보고',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방직결정' 등이 들어 있었다.

또한 4대강 생태하천조사사업 우선 시행방안 검토요청 등 등록대상인 수기결재를 받은 업무연락, 문비(수문) 수치해석 검증을 위한 워크샵 지문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송부한 기록물도 파기 대상이었다.

아울러 수기결재는 없으나 '대의주의'가 표시된 보고서(VIP지사 사항 포함), 표지에 'Vice 보고용'이라고 표기된 기록물도 파기대상으로 구분돼 있었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대규모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정부신하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록물은 생

산과 동시에 등록관리 해야 하고 기록물 폐기는 기록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기록관리 기본 원칙이 모든 공공기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자문상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고 “이들 자료가 장기 보존가치나 중요도가 낮아 일반자료로 분류해 개인 PC 등으로 관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4대강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주

요 정책결정 및 공사현황 등의 민감한 사항이 아닌 조정, 소수력 공사 등 주요 공정외의 현황파악을 위한 업무 연락자료가 대부분”이라며 “기록물 및 일반자료의 분류 등 더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 이미 ‘기록물관리 개선 전사 TF’를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스



먼 길 떠나는 아빠에게 미리 세배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 26진 문무대양함(DDH-11·4400급)이 6번째 파병길에 올랐다. 12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두 어린이가 파병에 나서는 아빠에게 미리 세배를 하고 있다.

## 광주 전통시장 등 특별소방점검 127건 무더기 적발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화재취약시설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10일 동안 화재취약시설 367곳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곳 127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에는 소방공무원 등 61개반 총 169명이 투입돼 ▲소방시설 차단·정지행위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 ▲비상구 폐쇄·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화재 위험요인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53개 시설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이나 방화시설 훼손·감지기 미설치·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소방시설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또 건축물의 임의 계획행위도 일부 드러났다.

이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과 방화시설 훼손 등 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축물 무단 증축, 임의 계획, 전기시설 불량 시설 7곳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조치했다. 나머지 감지기 추가 설치나 육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펌프 설비 고장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서은홍 기자

## 순천선관위 20일 지방선거 입후보 설명회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정당·후보자등록 신청일에 맞춰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이 지방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비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울림복지회 국민생활관교육장(1층)에서 '예비후보자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등록 신청일에 맞춰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이 지방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비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 운동방법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순천=김종영 기자

##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입건

광양경찰서는 12일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백모(2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백씨는 이날 오전 1시52분께 광양시 광양읍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5 차량을 몰다 마주오던 쉐타모 차량을 들이받아 김모(46)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4%(운전전혀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백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광양=김충권 기자

## 제주 20대 여성 살해 용의자 오리무중

제주 20대 여성 관광객 살해용의자 한모(33)씨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그가 경기도 지역에 숨어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소제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게스트하우스에 묵은 20대 여성 A(26)씨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한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0일 오후 8시35분께 김포행 여객기를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다.

한씨는 제주를 떠나기 직전까지 게스트하우스에서 평소처럼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2일 오전 10시25분께 사건이 발생한 게스트하우스를 압수수색해 A씨의 유류품과 숙소 안에 남아있을 미세증거, DNA 등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전 A(26)씨의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A씨는 7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에 들어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집을 풀었다.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서귀포시 성산읍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와 연인이 끊긴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A씨는 10일 낮 12시20분께 그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 바로 옆 폐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A씨가 발견된 폐가는 평소 인적이 드물어 마을에서 아무도 지나들지 않은 곳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신의 목 주변에서 발견된 멍 자국 등을 토대로 A씨가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결혼 숨기고 제자와 부적절 관계 50대 교수

서울 소재 한 대학 남교수가 여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폭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당시 기혼자였던 교수가 제자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주장이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으로부터 A(50)교수가 한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는 학생 B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상담센터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해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가 제출한 고발장과 학생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A교수는 B씨에게 제주도로 1박2일 여행을 갈 것을 제안했다. B씨는 A교수 학과 교수로서 잘 따르던 B학생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제주도에 동행했다.

A교수는 여행 중 B씨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

B씨는 이후 A교수와 결혼할 것이라고 믿고 매달 30만 원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A교수는 기혼 상태였지만 이후에도 B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학교와 학생회 등에 따르면 A교수는 B씨에게 대학원 및 사회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해 사실상 협박을 해왔다. B씨는 자신의 대학·사회 생활이 A교수로 인해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해 1년 반 동안 A교수의 성폭행에 대해 묵인해온 셈이다.

A교수는 “학생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지만 B씨와 관계가 깊어질 당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B씨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또한 B씨와 결합하려하자 B씨가 연구실 집기를 부수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

학교는 A교수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B씨에 대한 신변보호도 요청했다.

